

다산포럼

이제 협동조합이다

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흔히 협동조합하면 사회주의를 떠올린다. 과거 구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협동조합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방식의 협동조합은 노동자나 농민의 자발적 참여보다 강제적 동원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자율의 원칙이 훼손되고 이익 배분이 왜곡되는 모습을 지녔다. 주인이라 할 조합원이 객관화되는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이 살아남기 힘들었던 이유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협동조합이 유럽이나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 나라들의 경우 협동조합은 시장 경제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폐해, 즉

중소기업의 위기 및 영세사업자의 몰락, 비정규직의 증가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여 왔다.

최근 한국사회의 시대 가치로 떠오르는 복지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협동조합은 개별사업의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거나 자생력이 없는 관계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농협, 수협 등이 대표적 보기다.

특히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은 법적 규정이 없어 설립 자체가 어려웠다. 물론 자활공동체와 같은 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대체로 가능하기 어려웠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어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조합원 5인 이상이면 자수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창업이 가능했다면, 개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주주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을 통해 동업을 할 수 있다.

그간 고용과 복지의 대안으로 여겨진 사회적 기업도 위로부터의 주식회사가 아닌 아래로부터 협동조합에 의해 동네나 마을 등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노동자가 직원이며, 주인인 종업원 지주체와 같은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탈리아의 트렌티노나 블로냐, 스페인의 몬드리안, 영국의 스코트란드 등이 대표적인 조합도시다.

트렌티노의 경우 주민의 1인당 GDP가 3만 유로로 EU 평균 2만8000유로보다 10% 가까이 높다. 주민들은 유럽의 재정위기 아래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서로 도우면서 생존하고 있다. 실업률도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평균 10%에 비해 5% 이하로 낮다. 유럽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유는 간단하다. 5만 개에 달하는 농협, 농기공연, 전자산업, 기계산업 등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체의 중심에서 협동조합이 있다. 인구 53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조합원이다. 농업협동조합은 생산과 유통의 90%, 신용협동조합은 전체 예산의 60%, 그리고 소

비자협동조합은 전체 유통의 6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도 고민이 없지 않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후속세대의 양성이다. 세계화의 와중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지역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이전에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이끌어 갈 후속세대를 키워야 하는 숙제도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의 1위 1표가 아닌 민주주의 1인 1표에 원칙을 따른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가 적당히 일하는 다수를 면역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합원 사이의 불신이 존재할 수 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끊임없는 내부 조직 변화, 엄격한 조합원 기업 요건, 전문스텝 고용 등을 통해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지역 내외의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지역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키울으로써 정부나 시장이 못하는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NGO 칼럼

푸른길의 새로운 도전, 시민에 의해 관리되는 푸른길

이경희
(사) 푸른길 사무국장

푸른길공원의 마지막 구간인 남광주 푸른길공원의 준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월이면 남광주 푸른길공원의 조성이 마무리되고 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까지의 7.9km의 페션부지 푸른길공원 전 구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페션부지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푸른길로 결정되었고, 이후 시민들은 자신이 요구한 푸른길공원의 조성에 힘을 보태왔다.

푸른길공원은 도심철도의 이설부지를 경

전철로 활용하고자 했던 광주시의 계획에 맞서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푸른길로 조성을 요구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시민운동의 결과로 푸른길로 결정되어 '시민 참여 도시계획 결정의 첫 사례'로 푸른길 결정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다.

또한 2003년 페션부지가 푸른길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민간단체에서는 '푸른길 100만그루 헌수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금을 모으고, 주민참여 설계 및 조성활동을 통해 푸른길공원 조성을 참여해 왔다. 시민은 만들어진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직접 만들어감으로써 푸른길공원의 주체로써 시민참여 녹지조성의 모델을 만들었다. 더불어 광주시 행정은 이러한 시민참여를 신뢰하고 지원하면서 민관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푸른길의 가치를 높여나갔다.

과거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었던 페션부지는 푸른길로 바뀌면서

주변은 변화되어 왔다. 기차의 기적소리 요란한 공간이 새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치고, 주변의 산과 주택들은 푸른길에 어울리는 형태로 리모델링이 되었다. 또한 푸른길 곳곳의 광장에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푸른길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푸른길을 걸으며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 가족간의 다툼이 사라진 이야기, 마음이 변화되는 이야기 등 푸른길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풍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시민들은 삶의 변화를 매개한 푸른길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한편, 푸른길을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시민참여 관리활동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모여져 지난해 12월 24일,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었다. 페션부지의 푸른길 결정과 조성에서 함께 한 주민들과 시민들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첫 공원으로 푸른길

공원의 틀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들의 쉼터이고, 학생들의 통학로, 문화발전소인 푸른길공원의 이용자들이 푸른길의 관리를 위해 힘을 보낼 수 있고 푸른길공원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푸른길공원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청소년, 주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푸른길에 쏟아 붐고, 사계절 푸른길의 생태와 문화적 활동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참여하여 푸른길공원을 가꾸어나갈 것이다.

푸른길공원 전 구간의 완성을 위한 노력은 푸른길공원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전환될 것이다. 푸른길공원이 시민참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참여 관리를 위한 활동은 푸른길공동체를 완성해나가는 바탕이 되어 생태문화공동체로서의 광주를 만들어갈 것이다.

기고

건강과 행복도시, 광주에 희망이 있다

김준영
광주시 체육진흥과장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주최한 워크숍에서 한 노교수님의 질문에 "60세 후반 정도.."로 답변 드렸더니, 93세라는 말씀에 놀랐던 적이 있다. 그분은 다른 아닌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으로 현재까지 30년간 수영을 매일 거르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이셨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놀란 것은 당연하다.

의료·생명 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 등으

로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는 방증인 셈이다.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 차원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대다. UN은 2009년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을 보편화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발표하고, 학술용어로 Homo Hundred를 쓰는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100세 시대 대비책으로의 생활체육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해왔다.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에 의하면 체육활동 참여 총인의 선행조건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26.5%)과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20.7%)를 꼽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민선 5기 들어 모든 시정의 가치를 '시민의 건강과 행복'에 두고, 전략적인 중점 추진분야를 생활체육시설 확충,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위

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구다목적체육관, 북구우산수영장, 동림다목적체육관 견인은 물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인조잔디구장은 매년 4개소 정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운동장은 30개교 체육관은 191개교를 개방하여 시설 확충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0세 시대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동호인은 물론 가족 단위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 위해 132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 및 소외계층 지도 배치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힐링 체육교실 운영도 확대하여, 체육을 통한 나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생활체육 광장운영 등 집 근처에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 109명을 배치, 생

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힘입어, 2011년 21만 명이던 광주시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2012년 34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전국평균인 6%(인구비 생활체육동호인비율)의 4배 가까운 23%를 기록, 생활체육활성화 도시로 변모했으며 2010년 동호인클럽육성 우수단체, 2011년 최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광주시가 '건강랭킹, 지역별 건강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80.7점을 획득해 2년 연속 1위로 평가받은 것은 이러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 고ぼり진다.

앞으로 우리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국제스포츠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민 100세 시대에 생활체육 동호인과 가족,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찍히는 사람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준다면 우연히라도 찍힌 영상을 제출하게 되므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이것은 차 안에서 버리는 순간을 포착해서 찍기가 사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파라치들처럼 따라다니며 찍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랬던 것을 이 앙천구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담배꽁초 투기장면을 신고할 경우 '파라치'를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거의 없다.

입소문이 퍼지자 다른 자치구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포상금 제도를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자.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도 차량 블랙박스 이용해 꽁초 투기 단속을

지금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학원에서 불법 교습을 하는 경우를 카메라로 활용해서 고발하면 돈을 주는 차파라치, 학파라치 등 종류가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파라치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래에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신고꾼들이 아주 많아서 부작용도 적잖다.

하지만 이미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이렇게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을 차 밖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찍는 경우는 전부 다 우연히 활용하는 것으로 전문 파라치들과는 개념

社說

'비리 백화점' 서남대, 교과부는 뭘 했나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수백억 원의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적발돼 뇌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학 설립자인 이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설립한 전남·전북지역 대학 4곳에서 교비 898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과부 감사 결과, 서남대는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나 다를 바 없었다. 먼저, 차명계좌로 교비 330억~4800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 및 타대학 설립 비용 등에 썼다고 한다. 특히 부실대학 선정을 모색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이 실제 37.8%에 불과하나 99.3%로 공시 했으며, 전입교원 수를 높일 목적으로 대학 직원 13명과 간호사 7명 등 20명을 허위로 임용했다.

또, 실태과목 이수시간을 제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허위로 학점을 주고, 이중 134명은 의학 학위를 취득 시켰다. 교과부는 이들의 학위를 취득 단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영광원전 총체적 난국, 근본대책 세우라

이단 고장과 비리로 불안감을 주고 있는 영광원전의 핵심부품에서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제어봉 안내관의 균열로 가동이 중단된 영광원전 3·4호기에서 이번 증기발생기 세관(細管) 결합까지 발견된 것이다.

영광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을 비울 때는 각각 2.59%, 2.39%로 나타났다. 1만 6428개의 세관 가운데 각각 425개, 393개가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다.

관막이란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균열 조짐이 발생하면 이를 막는 것을 말한다. 세관은 증기발생기 내 열을 전달하는 관으로 파열시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어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4호기의 관막은 법적 기준치는 8%로 아직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지만 1·2호기 각각 0.78%, 1.2%, 5·6호기 각각 0.47%, 0.65%에 비해 3~5배가 높다. 이는 3·4호기의 균열이 다른 원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즘이다. 또 3·4호기 모두 이미 제어봉 안내관 균열이 발견된 상황이라 그만큼 주민 불안도 커진 상태다. 주민들이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3·4호기 핵심부품은 모두 미국에서 제조한 인코넬 600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1980~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핵심부품에 사용된 인코넬 600은 고온·고압에서 부식·균열이 이뤄지는 단점이 있어 1990년대부터 대부분 국가들이 인코넬 600 재질로 교체했다.

문제는 한수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의 안전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한수원의 대책은 일시 방편에 불과하다. 관계당국은 이제라도 한국형 표준원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항구대책을 강구, 국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 鼓

씨름하면 으레 시골의 8척 장사와 황소를 떠올린다. 그만큼 씨름은 힘의 상징이었고, 별 즐길거리가 없었던 옛 시절, 보는 이로 하여금 큰 흥미의 대상이기도 했다.

<p